

일본 수출규제/한일 관계 동향(2020.8.8.~2020.8.14)

1. 규제품목 한국생산 관련

☐ 개별허가 대상 품목들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 내 생산 증대 등의 형태로 수출규제에 대응중¹⁾

○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시 적용되는 허가를 기존의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뒤, 관련 일본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악화

- 불화수소의 경우 스텔라케미파의 2020년 3월 출하량은 전기대비 30% 감소함. 2019년 11월 이후 수출허가를 받았으나,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전년 동월대비 약 80% 이상 감소함.

○ 이에 기업들은 한국에서의 직접생산,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출 등의 형태로 대응 방안을 모색

- (직접생산) : 도쿄오카공업(東京応化工業)은 2019년도 상반기부터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ADEKA는 반도체 메모리 DRAM용 전자재료의 한국 생산을 시작함. 타이요홀딩스는 반도체기판에 쓰이는 녹색 필름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의 신생 회사와 합작으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5월에 발표함.

* 한국 내 생산은 수출규제 이전부터 계획한 경우도 있지만, 각 기업들은 수출 리스크 회피를 위해 한국 내 생산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 (우회수출) : JSR은 벨기에와의 합병회사에서 생산하는 EUV용 레지스트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탈일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 관리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

○ 일본종합연구소는 한국 기업의 탈일본화로 인한 영향은 약 2년 정도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

1) 「半導体素材、韓国生産へシフト、輸出厳格化1年、東京応化工業など。」, 「日経産業新聞」, (2020. 8. 14).

- 한편 닛케이는 한국 제조업체들이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가운데, 한국 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하면서 한국산 소재들보다 더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

2. 강제징용 배상

□ 8월 12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²⁾

- 양정숙 의원은 8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국회의원 9인과 공동 발의

- 동 법률안은 기부금이 아닌 일본 정부 및 해당 일본기업이 손해배상 취지로 신탁한 신탁금에서만 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

- 재단의 재원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이 배상 취지로 내는 신탁금과 피고 기업과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가 대신 지불하는 공탁금으로 구성됨. 일본 언론은 지불에 강제성이 없고, 피고 기업(일본제철) 및 동 기업과 합병회사를 가진 포스코 등의 자발적 출자를 상정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³⁾

□ 일본 언론은 동 법률안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논평⁴⁾

-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의원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어서 법률안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전망

2) 「무소속 양정숙, 일제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법안 발의…」위로금 아닌 실질적인 배상액 지급」, 「TV조선」, (2020. 8. 12).

3) 「元徴用工問題：元徴用工問題 和解法案、韓国議員が提出 財団通じ賠償」, 「毎日新聞」, (2020. 8. 13).

4) 각주 3의 마이니치 신문